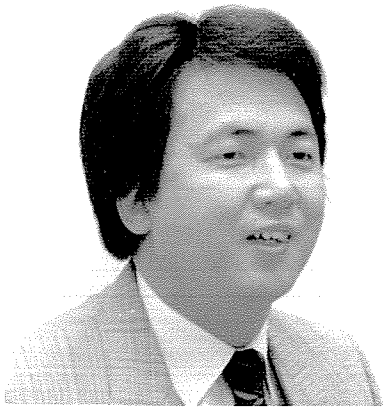


과학기술 발전위한 기부문화 정착의 필요성



張 舜 興

〈한국과학기술원 원자력공학과 교수〉

술개발만이 우리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인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이상 60년, 70년대의 저임금, 단순 노동에만 의존하여 수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시대는 아니다. 그동안 우리의 수출은 일부 반도체 등 예외가 있었지만 이웃나라 일본에서 만드는 것을 모방하여 일본에서 수입한 기계로 제조한 상품이 대부분이었다. 이제는 이런 수박 겉 핥기 방식의 기술개발은 통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를 추적하는 중국, 태국 등의 저임금에 기반을 둔 나라들에게 단순노동집약적인 기술은 넘겨야 할 것이다.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 기존 기술개발의 혁신만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고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의 역할 및 현주소에 대해 살펴보자.

〈대학의 역할 재고〉 우리는 전통적으로 대학의 역할을 교육(Education)과 지식개발(Knowledge Development)을 통한 가치의 창조라고 믿어왔다. 그러나 이제는 대학의 역할이 현실과 유리된 입장으로 남을 수 없다. 대학은 기술개발의 필수적인 투입요소인 4M(Money, Manpower, Materials, Management)을 마련하여 대학에 요구되고 있는 기술개발의 고도화, 평생교육과 고등교육에 대한 수요의 증가 등 사회적인 소명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그동안 고등학교에서 주입식 교육과 객관식 평가방법으로 인간의 오감에 의한 창의력보다는 기계적 암기능력이 일류대학에 합격하는 지름길로 인식되어 왔다. 일류대학에 진학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과외공부 등에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하는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일단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어떠한가? 학생에 비해서 턱없이 적은 교수, 부족한 실험실습기자재, 연구에 몰두

최근 우리는 대학의 기부금 입학제도에 대해서 많은 논란을 하고 있다. 대학의 재정적인 측면만 만족시키면 입학자격이 미달되더라도 대학에 입학이 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찬·반 양론이 뚜렷하게 갈라지고 있다. 현재까지는 국민정서와는 일치되지 않는 것으로 대체적인 여론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다.

우리는 국제화시대에 살고 있고 또한 한국은 이미 세계 13위의 무역 교역국이다. 세계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나라가 20여개국에 불과하므로 무역 교역 측면에서 한국은 이미 선진국 수준의 무역 교역국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국제교류가 빈번하고 일년에도 수백만명의 사람들이 여러 가지 목적으로 해외를 방문하고 또한 비슷한 목적으로 수백만명의 외국인들도 한국을 방문한다. 이미 한국은 우리만의 삶을 영위하는 곳이 아니고 세계속의 한국으로 세계경제와 함께 숨쉬며 약동하고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1988년에 1백40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무분별한 과소비와 정부의 흑자정책의 부재로 말미암아 일시에 적자국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일찍이 대외채무가 매년 증가하는 나라가 선진국이 된 예는 세계사에 기록된 바 없다. 더구나 우리처럼 부존자원이 거의 없는 나라에서 어떤 방법으로 적자를 흑자로 전환하고 또한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겠는가? 기

할 수 없는 각종 행정업무, 더욱이 학생들의 정치에 대한 참여 등으로 대학생들이 선진국의 대학생들과 국제무대에서 어깨를 나란히 하여 경쟁할 수 있을 것인지 심히 의심스럽다.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 대학자체의 수입으로 투자하기는 국내대학의 역력은 너무나도 미약하다. 지난해 국내 1백2개 사립대학의 수입중 등록금 비율은 평균 74.4%로써 거의 대부분의 수입을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어 등록금의 인상 등의 방법을 제외한 별도의 수입원이 없는 한 투자는 불가능하다. 미국의 예를 들면 하버드대의 92년 총수입 12억2천5백만달러(9천8백억원)는 등록금(31%), 연구수입(25%), 기부금(28%) 및 기타 수입(16%)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학의 자체수익사업이 활발한 데다가 돈이 나올 만한 구역은 놓치지 않고 찾아다닌 결과이다. MIT의 경우도 교수들과 학교, 행정당국의 노력과 산학협동의 결과로 대학수입 가운데 학생들이 낸 등록금의 비율은 불과 16%이다. 부자나라의 일류 사립대학이니 한국의 대학과는 비교도 할 수 없다고 체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단지 등록금에 의존하여 대학에 투자하려는 발상은 전환되어야 한다. 또한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의해서 몇년내에 대학이 개방되어 외국의 자본과 기술이 물밀듯이 들어와 우리의 대학을 잠식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여야 한다.

장래를 내다보는 과감한 투자 없이 성과를 바랄 수 없다. 대학의 연구실과 기업의 연구실이 캄캄하다면, 기술 선진화의 심장이 되어야 할 곳인 연구실이 우물안의 개구리처럼 낮잠만 자고 있다면 이처럼 가 막힌 일이 또 어디에 있겠는가?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적절할 때인 것처럼 이제라도 눈을 돌려 국제화의 물결에 눈을 떠서 개방에 대비한 대학의 국제경쟁력을 키워야 한다.

<기부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면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한 구제 또는 적선하고는 전혀 다른 성질인 것이다. 기부라는 것은 보다 높은 수준의 가치창조를 위한 상위 수준의 경영인 것이다. 일정한 재화를 투자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는 것이다.

문화적으로 선진국은 동반자적인 제휴, 계약정신이 투철하여 연구 및 기업활동과 제휴가 잘 이루어져 기업 또는 부유한 개인의 대학에 대한 기부와 유증(遺贈)을 포함하여 공공봉사 개념이 잘 정착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가족 중심적인 혈연문화가 팽배해 있어 공공봉사의 개념이 매우 빈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기부나 기증이 혈연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우리는 작년 충남대에 수십억원을 기증한 김밥 할머니의 이

야기를 알고 있다. 이와 같이 개인이 특정한 기관에 기부할 수도 있으나 기부문화를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키는 방법은 제도적인 장치를 수립하여 공공기관이나 개인기업이 대학이나 연구소에 투자하는 기부문화가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외국의 경우를 살펴보면 대학캠퍼스, 연구단지 및 과학단지가 기업 및 개인의 기부와 대학과의 유기적 연계에 의해 과학기술 개발을 위한 기부문화가 정착되어 있다. 예를 들면 스텐퍼드대학의 CIS(Center for Integrated System), 미시간대학의 ITI(Industrial Technology Institute) 및 MIT의 테크놀로지 스퀘어(Technology Square), 프랑스의 그레노블 등이 대표적인 산학연계를 통한 기술혁신센터이다. 이러한 기술혁신센터는 대부분 정부나 대학에서 부지를 제공하고 기업 또는 공공기관이 재원을 투입하여 건물 및 관련시설물, 운영비를 기부하여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인식의 전환 필요하다> 기부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가장 큰 과제는 인식의 전환이다. 정부의 지원과 자체수익을 확대하는 길밖에 없는 현실에서 대학이 언제까지나 등록금의 인상과 정원의 증가타령만 하게 둘 수는 없을 것이다. 대학은 이제 경영되어야 한다. 대학총장은 비즈니스맨이어야 한다. 재원이 풍부하여야 장학금도 줄 수 있고 새로운 기자재 및 실험설비도 갖추 수 있으며 유능한 교수를 초빙할 수 있을 것이다. 수익사업을 위한 교수와 학생, 행정당국의 인식의 개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때이다.

인재양성의 수혜자인 정부가 쥐꼬리만한 예산지원에 그치는 현실은 재고되어야 한다. 일본의 사립대학들만 해도 예산의 10% 정도는 정부의 지원을 받고 있다. 또 대학이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서 비업무용 토지라는 이유로 부과하고 있는 토지초과이득세와 국립대에 대한 기부금에는 세금을 면제해주면서 사립대에서 기부받는 기부금에 대해서는 소득금액의 5%만 세금을 공제하는 불공평한 세법조항도 재검토되어야 한다.

기초기술과 응용기술에 대한 기업의 필요성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대응할 수 있는 산학협동 체제인 기술혁신센터의 설립을 서둘러야 할 때이다. 이에 필요한 재원 및 부지는 공공기관과 관련기업의 적극적인 재원기부와 연구기관 및 대학의 부지제공을 통하여 기술혁신센터가 설립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중소기업진흥공단, 생산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의 정책자금이 대학 및 연구소의 기술혁신센터 활동과 연계되도록 정책적 배려를 하여 집행되면 기술개발의 상승효과와 극대화가 되어 국제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